

경사노위, 美 관세조치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 논의

- 트럼프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영향과 대응 과제 등 모색 -



▲ 4월 25일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5일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 및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및 노사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조정, 고용 재편, 노사 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이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관세조치가 경제와 산업,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제, 노사정 협력방안 및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통상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의 협력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트럼프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TF'를 구성해 관세 조치가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slc**

담당 전문위원실 강금봉 전문위원

‘트럼프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 서면 브리프

1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과거 IMF 및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와는 그 영향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 현재의 정책 대응 방안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어 구조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2 경제와 산업에 대한 진단

참석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및 미·중 갈등 심화가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높여,

① 국내 소비와 설비투자 위축, ② 경기 둔화 및 고용 부진 가속화, ③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주력 제조업(자동차, 배터리, 전기·전자, 전기장비, 화학)뿐 아니라, 연관된 중소 협력업체까지 크게 영향, ④ 특히 중국의 기술추격과 고품질 저가 제품 확산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3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고용시장이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과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가는 추가적인 고용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전망이 제시됐다. (*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2000명 줄어든 439만9000명이고,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월대비 20만6000명 감소하여, 고용률이 44.5%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음)

- ① **제조업 신규 채용 부진** -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청년 고용과 뿌리산업 중·고령층 고용이 위축될 수 있으며, 구조적인 고용불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② **고용 충격은 시차를 두고 가시화** - 미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고용변동 효과는 경기-고용변동 간 시차로 인해 산업에 먼저 영향을 주고 2025년 말~2026년 이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
- ③ **해외 생산기지 이전의 파급효과** -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④ **중간 수준의 숙련 일자리 축소와 양극화** - 글로벌 경쟁력 격차 속에서 중숙련 인력의 수요 감소, 고숙련과 저숙련 간 일자리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제기됨
- ⑤ **복합적인 구조적인 충격** - 수출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AI로봇 등 기술변화,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노동시장 전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4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전개 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부른 정책 수립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침착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① **산업의 고부가가치 구조 전환 필요** - 기존 조립·가공 중심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 기반 첨단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
- ② **기술 생태계 경쟁력 확보** - 중국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시급함
- ③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초격차 확보가 중요하므로 우수인력을 양성·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함
- ④ **노사 상생을 위한 구조조정 대응체계 필요** - 수출 감소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서 구조조정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향후 경사노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관세 조치가 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의제와 정책적 대안을 발굴해 나갈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환기 노동시장 세대공감 자문단과 함께 해법 찾는다

-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 개최 -



▲ 4월 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일 대회의실에서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를 열고 전환기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청·장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앞서 경사노위는 3월 26일 열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이하 '토론회)」를 통해 전환기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26일 열린 토론회에 이어 자문단의 시각에서 복합위기 해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청년 고용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최근 경기 침체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빠른 확산으로 인한 저연차 업무 대체가 청년 신규채용의 급격한 감소를 유발하고 있으며, 원·하청, 수도권·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 심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자문위원들은 “청년들이 잡코리아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오류인가 싶을 정도로 채용 공고가 없다며 위기감을 토로할 정도다”, “87년 체제의 노동 약자 프레임 등을 지나 청년 약자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시기다”, “최근 청년들은 삼중고(일자리·국민연금·국가채무)를 겪고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근무시간 유연화 ▲취업규칙 제도와 저성가자 관련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인구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등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



▲ 권기섭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결의 새로운 접근 등이 논의됐다.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노사 중심 사회적 대화 구조로는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018년 원자력 발전소 폐쇄·유지 논쟁을 참고한 ‘국민참여형 숙의 모델’ 적용도 검토해 불만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와 부작용을 정확히 분석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상임금이나 파견 등 노동 문제가 사법부 판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법·제도 등을 개선하거나 노사가 책임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향도 언급됐다.

권기섭 위원장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고용·노동 전문가 100

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노사정이 우선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고용자 계속고용 방안,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대응 전략 수립 등을 꼽았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 97%는 노동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노동시장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가 책

임 있는 자세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자문회의에서 나온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각종 회의체 논의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일자리, 노동시장 규범 현대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eslc**

담당 기획과 류형민 사무관

“항만·선원 일터의 해법, 사회적 대화로”

- 권기섭 위원장, 부산지역 주요 노사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 권기섭 위원장은 4월 23일 부산지역을 방문하고 부산항운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4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연맹(선원노련)’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 주요 사회적 대화 의제에 대한 현장의견과 지역 노동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은 우리나라 대표 항구도시로,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 세계 7위, 환적 물동량 세계 2위의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국가 경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기섭 위원장은 부산항만공사 임원진과의 만남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이 함께 요구되는 항만산업 특성상 노사 협력은 필수”라며, “21년 연속 무분규 단체협약을 이어온 부산항만공사의 안정적인 노사문화는 노사 상생의 실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열린 부산항운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권 위원장은 “항만은 여전히 위험하고 강도가 높은 업종으로 그에 따른 산재 문

제와 함께 고용불안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상존한다”며, “말로만 끝나는 대화’가 아니라, ‘실천과 변화가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원노련과의 간담회에서 권 위원장은 “선원은 단지 해기술자가 아니라 해외로 연결된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고령화와 외국인 선원 증가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선원의 고용유지와 질 개선을 위한 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차이를 공존과 상생의 구조로 풀어내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본질”이라며, “항만·선원 지속가능한 일터의 해법은 사회적 대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사노위는 지속적으로 지역 및 업종 노사 단체를 방문해 사회적 대화 의제에 대한 현장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slc**

담당 대외협력실 이현욱 전문위원